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3년 06월 17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주민참여감독대상자(통장) 실비 지급 근거 마련

박문수 의원 발의한 통장 권익향상 위한 개정 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처리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박문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을 공사는 50억 원, 물품 · 용역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단서조항 중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라는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문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감독자는 각 공정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사 계약 이행상의 불법 ·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크다"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요공정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금전적인 보상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각 동의 통장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실비지급 근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강북신문 4면

통장 권익향상을 위한 개정 조례안 통과

박문수 의원, 주민참여감독대상자 실비 지급 근거 마련

강북구의회는 6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박문수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을 공사는 50억원, 물품·용역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단서조항 중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라는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문수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감독자는 각 공정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크다"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요공정별 수당을 지급할 근거 마련으로 통장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실비지급 근거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북부신문 4면

강북구 통장 권익향상 위한 개정 조례안 통과

박문수 의원 "통장들에게 실비지급 근거 이뤄지게 돼 기뻐"

강북구의회는 지난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박문수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 사진)이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을 공사는 50억 원, 물품 · 용역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단서조항 중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라는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문수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는 각 공정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크다"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요공정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금전적인 보상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각 동의 통장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실비지급 근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